

국민의당 ‘포스트 박지원’ 파격 카드 나올까

내달초 비대위장 사퇴...주승용·박주선 고사에 신용현 등 거론
12월 전대 당대표 박지원·김한길·정동영·이상돈 등 물망

국민의당이 12월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대표를 선출한다. 특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내달 초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위원장은 28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10월 초에 비대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12월 내 전당대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총선 홍보비 파문에 따른 안철수·전경배 공동대표의 사퇴로 지난 6월 말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는 내달 6일을 전후해 사의를 공식

표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차기 비대위원장은 박 위원장의 사퇴 이후 새 대표가 뽑히는 연말까지 두 달여 동안 정기국회 대응과 전대 관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애초 당내에서는 외부 명망가를 초빙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영입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내부 인사 발탁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박주선, 주승용 의원 등 중진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박주선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데다 주승용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를 염

두에 두고 있어 고사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초선·비례대표 출신의 신용현, 오세정 의원 등도 ‘깜짝’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신 의원은 과학계 출신으로 정책 전문성을 갖춘 가운데 정치 현안 대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신임 비대위원장에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전윤철 전 공관위원장도 비대위원장 카드로 거론되고 있지만 나이가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대선 국면에서 당의 사령탑을 맡을 새 대표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지원 위원장의 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동영, 이상돈 의원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이 차기 당권 주자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의 이날 의총에서는 전대 및 대선 후보 선출 규정과 관련한 의견이 수렴됐다. 당헌·당규제개정위 측은 영남 등 당세가 약한 지역 당원들의 투표권에 가중치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으나, 당의 주류인 호남 지역 의원들은 등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후보를 외부에서 영입할 가능성을 고려한 포괄적 표현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추후 수정의 여지를 남기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국민의당은 이 같은 당내 의견이 반영된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30일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2기 출범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2기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난날 새로 선임된 최상용 이사장과 박원암 소장이 공식 취임했다.

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냉전의 틀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내일’은 시대 정신에 담긴 국민 요청을 정책으로 담아낼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평화로운 한반도’를 주제로 토론폰서트를 한 뒤 회원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임동욱기자 tuim@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확정

누진율 11.7배서 2.6배로 줄여
“월 3340원~3만7490원 절감”

더불어민주당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 구간 누진율을 현재 11.7배에서 2.6배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28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개편안이 적용되면 월 전기요금이 150kwh 사용 시 4050원, 250kwh 사용 시 3340원, 350kwh 사용 시 1만7750원, 450kwh 사용 시 3만7490원이 절감된다고 더민주는 설명했다.

현행 누진제는 1kwh당 요금이 1단계에선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 오르게 돼있어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시민의 부담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민주는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월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했던 것은 저유가로 인한 이익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정책용 전기요금 태스크포스(위원장 홍익표 의원)는 이번 개편안 발표를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

금 인하,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와 전기료 원가 절감, 비주거용 가구 전기요금의 일반용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 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날 최고위 회의장 배정 결계에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를 세우고, 개편안 내용을 요약한 패널을 배치하며 ‘민생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최고위 회의에 마포에 거주하는 주부

손희희씨를 초청, 추미애 대표의 모두발언 전에 발언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손씨는 당 지도부에 “합리적인 누진제 개선을 해주셔서 국민이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추 대표는 “손 주부께서 24평 아파트에 사시는데 하루 8시간 에어컨을 켜고 고지서에 33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며 “평소 6배 이상의 요금 폭탄을 보고 우리당이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고 본다. 전기료 문제가 때를 놓치지 않고 국정에 반영되도록 우리당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북한 수해 심각...인도적 차원 지원해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통일부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05년 19만달러(약 2억원), 2006년 8003만달러(약 800억원), 2007년 4452만달러(423억원), 2010년 634만달러(72억원)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1297억원 상당의 대북 수해지원을 했다. 이는 모두 우리 정부가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먼저 제한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 북한의 요청이 없는 한 원칙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바 있다.

박 의원은 “2005년 이후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모두 우리 정부가 먼저 제의해 이뤄졌다”면서 “북한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통일부의 해명은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軍 전술스마트폰 가격만 비싸고 성능 떨어져”

더민주 이종걸 의원

우리 군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으로 개발된 ‘전술스마트폰’이 가격만 비싸고 성능은 떨어진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8일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TICN 핵심사업으로 개발돼 보급을 앞둔 전술스마트폰의 가격은 대당 280만원으로, 갤럭시 S7 스마트폰 출고가(83만6천원)의 3배를 넘는다. 그러나 전술스마트폰은 높은 가격이 무



색할 정도로 성능은 보잘것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갤럭시 노트 7보다 크고 두께가 2배 이상인 데다 무게는 234g으로, 갤럭시 S7에 비해 훨씬 무겁다. 사용자가 그만큼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무엇보다도 군용 GPS(인공위성위치정보)를 내장하지 않아 전쟁이 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코레일 최근 5년 청년의무고용 1%대 그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최근 5년간 청년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매년 정원의 3%



를 채용해야 하지만, 2012년 1.3%, 2013년 0.5%, 2014년 1.7%, 2015년 1.1%, 2016년 상반기 1.5%에 머물고 있다.

최 의원은 “청년 의무고용제는 여전히 다수의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들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 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전남 18개 시·군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미달”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전남도내 시군 22곳 중 18곳이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아 28일 배포한 ‘도내 장애인콜택시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내 1·2급 장애인 수는 2016년 기준 2만9120명이다. 이에 맞는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는 144대



로 전남은 현재 100대가 운행 중이다.

시군별로 도입 현황을 보면, 여수시·순천시·광양시·함평군 4곳이 법정대수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지자체 18곳은 법정대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구례·보성·영암·영광군은 아직 차량확보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4.7% ~ 4.9%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